

행정학

【총평 : 이 경】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직 7급 문제는 조직, 지방자치의 출제비중이 높은 기존 시험과 달리 인사 파트에서 많은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등의 세부적 법령 문제, 살라몬의 정책 분류나 다중합리성 모형과 같은 미시적 이론문항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구체적 법령상의 숫자, 기존 견해와 다른 견해 등이 출제되어 당황한 수험생도 많을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으로서는 지문을 꼼꼼히 읽고 생각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 법령이나 이론 문제는 대비하기 까다로우나, 다행히 정답이 명확하게 보이는 선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7급보다는 점수가 상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분별 문항분포>

구분	총론	정책	인사	조직	재무	지방자치
문항 수	6	3	5	1	2	3

7급 문제는 단순 암기보다는 흐름을 이해하고 푸는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이나 법령을 모조리 명확하게 암기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학적인 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론의 사회적·시대적 배경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야 새로운 지문에 대처하기 용이합니다.

이제 2019년의 모든 정규시험이 끝났습니다. 훌륭한 수험생 분들이 있는 것만큼 마음이 쓰라린 분들도 계실것지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부터 다시, 파이팅입니다!

- 이 경 드림-

- 문 1. 로위(Lowy)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 ①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②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③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④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정책-1] 로위의 정책분류

① [O] 강제력이 직접적이며 행위의 환경에 적용되는 것은 재분배정책이다.

<로위의 정책분류>

	개별행위에	강제력 적용	행위의 환경에
간접적 강제력 행사	분배정책		구성정책
직접적 강제력 행사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 문 2. 다음 중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 ㄴ.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 ㄷ. 수수료 감면을 위한 주민의 조례 개정 청구
- ㄹ.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주민투표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자치-1] 주민참여제도

④ [O]

ㄱ.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이 불가능하다.

▶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ㄴ.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불가하다.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사도는 5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사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ㄷ. 수수료 감면을 위한 주민의 조례 개정 청구는 불가하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폐기청구)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ㄹ.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주민투표는 불가하다.

▶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문 3. 다음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 체제를 선호한다.
- ㄴ.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 ㄷ.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한다.
- ㄹ. 행정관리의 이념으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 ㄹ. 집권적 계층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ㄹ

[총론-1] 신공공관리론

② [O]

ㄱ. [O]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 의한 경쟁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을 선호한다.

ㄴ. [O] 클린턴 행정부에서 정부개혁의 10대 원리를 강조한 오즈본과 가블러(Osborne & Gaebler)는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ㄷ. [X] UBS처럼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입법국가 시기이다.

ㄹ. [O]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적 행정가치인 효율성을 강조한다.

ㄹ. [X] 전통적 행정부에서 집권적 계층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신공공관리론은 탈계층제적 정부에서의 광범위한 재량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것을 강조한다.

- 문 4.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 ②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④ 임용권자는 지역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인사-1] 공무원 인사제도

- ③ [X]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① [O] 전문경력관에 대한 설명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급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② [O]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O]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급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문 5. 신제도주의의 주요 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며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본다.

[총론-2] 신제도주의

- ③ [O]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구조나 정당형태 등의 제도적 변수를 주로 연구한다. 구조를 보는 거시적 관점과 개인에 관심을 가지는 미시적 관점에 비하여 중범위 연구에 해당한다.

- ① [X]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선호가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한다고 보지 않는다. 선호는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본다.

- ② [X] 경로의존성, 권력의 비대칭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이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동형화를 중시한다.

- ④ [X]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본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제도 및 문화를 포함하여 사람의 표준화된 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창조되고 공고화된 결과물로 본다.

문 6.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딩(Vedung)은 정책 도구를 규제적 도구(sticks), 유인적 도구(carrots), 정보적 도구(sermons) 등으로 유형화한다.
- ② 권위(authority)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은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다.
- ③ 정책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④ 살라몬(Salamon)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체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정책-2] 정책수단

- ④ [X] 공적보험(insurance)은 보통 정부의 개입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 직접성이 높은 수단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정부의 활동을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구분할 때에는 보험을 간접적 수단으로 분류한다.

- ① [O] 비딩(vedung, 1998)은 정책도구를 감압적 권력에 기반한 규제적 도구, 보상적 권력에 기반한 유인적 도구, 규범적 권력에 기반한 정보적 도구(설교)로 구분하였다.

- ② [O] 권위에 기반한 정책수단은 강제성이 높은 규제로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 등이다.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합하다.

- ③ [O] 강제성이나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 이념적 가치, 정치적 역학관계 등이 영향을 미친다.

문 7. 다음 중 예산 원칙의 예외를 옳게 짝 지은 것은?

한정성 원칙

- ① 목적세
② 예비비
③ 이용과 전용
④ 계속비

단일성 원칙

- 특별회계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기금

[재무-1] 예산원칙

- ④ [O] 국회에서 정한 목적·시간·금액 외의 지출이 불가하다는 한정성의 원칙 예외로는 이용, 전용,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이월, 계속비, 조상충용, 과년도 수입 등이 있다. 예산을 한 장부에 모두 기록해야 한다는 단일성 원칙의 예외로는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이 있다.

- ①② [X] 목적세는 통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통일성 원칙의 예외 : 목적세, 특별회계, 기금, 수입대체경비

- ③ [X] 수입대체경비는 통일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완전성 원칙의 예외 : 전대차관, 기금, 순계예산, 수입대체경비, 차관물자대

문 8.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먼(Simon)의 실질적(substantive) 합리성은 행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② 디징(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진화론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 ③ 기술적 합리성은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시키는가, 즉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 ④ 사이먼(Simon)은 인간이 실질적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총론-2] 합리성

- ② [X] 디징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으로 구분한다.

<사이먼과 디징의 합리성 분류>

학자	분류	설명
사이먼 (Simon)	절차적(Procedural) 합리성	• 제한적·주관적 합리성으로 결정과정이 이성적이라면 합리성으로 봄. • 행동을 선택하기 위한 절차가 이성적·합리적이라면 결과를 수용함. • 결과보다 결정과정을 중시하는 개념임.
	내용적(Substantive) 합리성	• 실질적·객관적 합리성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수단을 선택하는 것 • 결정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을 둠.
	□ 사이먼은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갖지 못하는 행정인(Administrative Man)이므로 내용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차선으로서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함.	
디징 (Diesing)	정치적 합리성	정책결정과정과 구조를 개선하는 합리성으로 영향력이 큼.
	경제적 합리성	비용편익을 비교하여 최적 목표와 대안을 선택
	사회적 합리성	사회체제 구성요소 간의 조화로운 통합성을 추구함.
	법적 합리성	법의 위반이 없는 대안을 선택
	기술적 합리성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수단의 선택

문 9.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мок(Dimock)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며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② 프레데릭슨(Frederickson)과 왈도(Waldo) 등 신행정학의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가치로 주목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③ 롤즈(Rawls)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나뉜다.

④ 슈버트(Schubert)는 공익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총론-3] 행정가치

④ [X] 공익실체설은 엘리트적 공익관으로 민주적 공익과 무관하다. 슈버트, 로버트 달 등은 공익을 민주적 과정과 절차적 합리성을 통해 사익이 공익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았다.

문 10. 미국 행정의 발달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잭슨(Jackson)이 도입한 업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약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후퇴 및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②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가 지배했다.

③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력과 절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④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Appleby)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에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총론-4] 미국 행정의 발달과정

③ [O] 뉴욕시정조사연구소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력과 절약의 실천방안과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정부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하였다.

① [X] 업관주의는 관료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을 높인다.

② [X] 해밀턴, 제퍼슨, 워싱턴 등은 1776년 미국의 건국을 이끌었다. 미국의 건국이념은 '자유'로 해밀턴보다 제퍼슨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제퍼슨은 미국 건국의 토대가 된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④ [X] 애플비는 정치행정일원론자로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정합적·연속적·순환적임을 강조했다.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지고 행정의 중립성과 능률성을 강조한 학자는 우드로 윌슨(W.Wilson)이다.

문 11. 실적주의(meri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②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의 한계이다.

③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④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인사-2] 실적주의

① [X]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르기 위한 중앙인사기관을 필요로 한다. 미국에서 실적주의를 확립한 '펜들턴법(Pendleton act)'에서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 공개경쟁채용 시험, 독립적인 중앙인사기관, 합격한 공무원에 대한 시보임용기간, 신분보장 등의 규정을 두었다.

문 1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론은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② 엘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를 만족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④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성취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조직-1] 동기이론

② [O] 엘더퍼는 욕구를 존재(Existence), 관계(Relation), 성장(Growth)으로 구분하고 상위욕구가 만족되지 않은 경우 하위욕구가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 충족된 욕구는 다시 동기로 작용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발현된다는 주장을 비판·보완한 것이다.

① [X] 매슬로우는 단계를 이루고 있는 욕구는 순차적으로 동기화된다고 보았다. 한번 충족된 욕구는 동기로 작용하지 않으며, 충족되지 않은 상위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동기가 된다고 보았다.

③ [X] 허즈버그는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와 같은 대인관계를 위생요인으로 보았다. 위생요인은 충족되지 않은 경우 불만을 야기한다.

<매슬로우의 욕구계층과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 비교>

매슬로우	허즈버그	
	위생요인	동기요인
자아실현욕구	-	- 성취감 - 인정
존경욕구		- 책임감 - 승진 - 직무 자체 - 자아개발 - 자아실현
사회적 욕구	- 기관의 정책 - 감독방식과 내용	-
안전욕구	- 대인관계 - 신분보장	
생리적 욕구	- 보수 - 작업조건 - 근무환경	

④ [X] 포터와 롤러는 과업성과는 만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기존의 명제를 거부하고 성과가 만족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문 13.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ㄴ. 검사
 ㄷ.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ㄹ. 도지사의 비서
 ㅁ. 국가정보원의 직원

-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인사-3] 공무원 분류

④ [O] ㄱ.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 ㄴ. 검사는 특정직, ㄷ.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ㄹ. 도지사의 비서는 일반직, ㅁ. 국가정보원의 직원은 특정직이다.

문 1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②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③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대립형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④ 기관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치-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④ [O] 기관통합형은 별도의 집행기관에서 구축되는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고 견제와 균형이 미흡하며, 부처할거주의가 발생하기 쉽고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 반면 정치적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적 행정이 가능하며 강력한 정책효과가 나타난다.

- ① [X]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한 강수장형(수장우위형) 기관대립형이다.
 ② [X] 영국의 의회형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의회 의장이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한다.
 ③ [X]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통합형의 한 유형이다.

<기관통합형의 유형>

의회형(Parliamentary System)	위원회형(Commission System)	의회의장형
• 영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영연방 국가의 유형 • 의회가 입법기능과 집행기능 전반을 관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의회의 의장이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 • 의회에 전문기능별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분과위원장이 행정부서의장이 되고, 분과위원이 행정부서의 간부가 됨으로써 각 분과위원회가 행정 각 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행정업무를 수행	• 미국의 카운티(County)에서 볼 수 있는 유형 • 주민에 의해 직선되는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행사 • 위원회는 3~5인 정도의 소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가운데 1인이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담당하지만, 그 실질적 권한은 크지 않음. • 각 위원은 담당하는 전문기능 분야를 갖고 각 행정부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1982년에 시행된 프랑스의 지방분권법에 의하여 중간자치단체인 데파르트망과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에서 채택된 유형 • 지방의회의 의장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그 의장 밑에 사무조직을 둠.

문 15. 공직자윤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립대학교의 학장은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5천만 원이다.
 ④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재산변동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사-4] 공직자윤리법

② [O] 국내 시가 10만원 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X] 국립대학교의 학장을 비롯하여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은 재산등록대상자이다.
 ③ [X]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X] 퇴직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문 16.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무사안일의 경향을 가진다.
 ②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③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 직원을 충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④ 브레넌과 뷰캐넌(Brennan & Buchanan)의 리바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총론-5] 파킨슨의 법칙

① [X] 파킨슨의 법칙은 본질적 업무가 증가하여 부하를 충원하는 경우 파생적인 업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관료제가 팽창되는 것을 설명하는 법칙으로, 업무 간의 관계나 무사안일과는 관련이 없다.

④ [O] 리바이던 가설은 정부의 권력이 집권화될수록 규모가 팽창한다는 것이다. 이는 집권적 조직인 관료제가 비대해지는 것과 상통한다.

문 1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2011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자치-3] 참여예산제도

③ [X]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 18.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총론-6] 전자정부

- ③ [X] 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문 19. ㉠, ㉡에 해당하는 권력모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 (㉠)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 엘리트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들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 (㉡)은 정치권력에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으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

㉡

- | | |
|-------------|-------------------|
| ① 밀즈의 지위접근법 | 달의 다원주의론 |
| ② 밀즈의 지위접근법 |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
| ③ 헌터의 명성접근법 | 달의 다원주의론 |
| ④ 헌터의 명성접근법 |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

[정책-3] 정책주도자모형

- ③ [O] 지역사회(애틀랜타)의 명성엘리트를 연구한 것은 헌터(Hunter)이다. 정치권력은 의사결정권력과 무의사결정권력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엘리트론자인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주장이다.

<엘리트주의 이론 전개>

고전적 엘리트이론 (19세기 말, 유럽)	• 동절적이고 폐쇄적인 엘리트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 (고전적 자유주의 비판)한다. •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 엘리트 지배는 필연적인 현상, 파레토(Pareto)의 2:8의 법칙
미국 엘리트이론 (1950년대)	• 1950년대 미국사회의 엘리트론을 연구하였다. • 밀스(Mills)의 지위접근법과 헌터(Hunter)의 명성접근법이 주요 연구이다.
신엘리트이론 (Neo-elitism)	• 엘리트는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결정을 하며,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의 행태를 보인다. •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권력의 두 얼굴(1962)'에서 정책결정 권력과 '무의사결정 권력'을 강조하며 달(Dahl)의 다원주의가 무의사결정 권력을 경시함을 비판한다.

문 20.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 ②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모형의 유용성이다.
- ③ 단절균형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 ④ 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예산-2] 예산결정이론

- ④ [O] 다중합리성 모형은 관료들의 의사결정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다중적 결정으로 구성됨을 강조한다. 이 모형은 예산과정이 단일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전개된다는 전통적 예산이론이 현대예산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 ① [X] 합리모형은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 ② [X] 점증모형은 비판적 사고없이 기존 사업에 대해 당연히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 ③ [X] 단절균형모형에서 예산결정자는 보수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점증주의의 주장과 달리 특정 사건에 따라 급격한 예산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